

| 업종별위원회\_ 보건의료업종위원회(발족예정) |

# 노동시간 단축·산별교섭·의료환경 논의 예정

손동희 전문위원

## 개요

보건의료업종별위원회는 2018년 4월 3일, 제2차 노사정대표자회의에서 노동계로부터 보건의료 업종별 위원회의 설치 제안을 시작으로 구상되기 시작하였다. 한국노총의 의료노련이 보건의료업종별 위원회 설치 제안서를 처음 제출(4.6)하였고 곧이어 민주노총의 보건의료노조가 제안서를 제출(4.11)하였다. 이후 2018년 9월까지 노동계 간담회가 4차례 진행되었고, 노동계와 정부 간 간담회, 경영계와 정부 간 간담회 등을 통해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어 왔다. 그동안 논의의 주요 내용은 보건의료 업종별위원회의 위원구성 문제였고 특히, 사용자 구성 문제가 집중 논의되었다. 이후 최근에는 노동계 참여위원 구성 문제가 다시 부상하면서 보건의료업종위원회의 구성·운영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 주요 의제

양대 노총의 초기 제안한 제안서 상의 의제들이 그간 간담회를 거쳐 오면서 3개의 큰 의제로 방향이 잡혀가고 있다. 첫째는, 보건의료산업 노동시간 단축방안이며 둘째는, 보건의료산업 초기업단위 노사관계 및 산별교섭 정착을 위한 정책과제, 그리고 셋째는 의료환경 및 노동정책 변화에 따른 보건의료산업 노사정 공통과제이다. 경영계인 병원 측의 의제 제안은 아직

제출된 바 없어 여기에 포함되지는 않았다. 이들 의제들은 추후 경영계 제안 의제를 포함하여 위원회 내에서 자율적인 조정과정을 거쳐 확정될 사안이다. 의제의 1순위로 제시된 노동시간 단축 방안은 보건의료업종이 노동시간 특례업종에 해당된다는 점에서 눈여겨 볼 의제이다. 간호사들의 장시간 노동 근절과 보건인력 충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 등 노동시간 단축 의제의 합의가 다양한 측면에서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산별교섭 정착과 관련한 의제는 기업별 교섭 구조에 있는 대다수의 업종·산별노조의 기대라고 볼 수 있다. 산별노조에 대응하는 사측 대표체의 구성에 대한 요구가 있다. 그 밖에 노사정 공통과제는 의료환경 변화에 대한 노사의 공통 관심사를 다루기 위한 큰 주제이다. 현재 일자리위원회의 보건의료특위에서 다루고 있는 의제와의 조율 문제는 위원회 구성을 전후하여 다루어야 할 과제로 판단된다.

## 위원구성

보건의료 업종별위원회 구성을 위한 그간의 다양한 논의와 간담회는 ‘위원 구성’이 핵심 의제였다. 병원을 대표하는 경영계의 위원구성은 보건의료부문 특성상 전체 병원을 포괄할 수 있는 대표성이 취약한 구조이다. 그 가운데 대한병원협회는 그나마 다수의 병원을 포괄하는 협회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지만 이 역시 모든 병원을 아우르는 대표성에는 문제 제기가 되어왔다. 특히 국립대병원과 사립대병원은 그 영향력 측면에서 실질적으로 중시될 필요가 있으나 대한병원협회가 이들 병원을 대표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점이다. 국립대병원은 ‘국립대병원장협의회’가 따로 조직되어 있고 사립대병원의 경우에도 ‘사립대의료원협의회’가 별도 조직되어 있기도 하다. 그런가 하면 공공적 성격으로써 국립중앙의료원이나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 등도 위원구성 시 고려되어야 할 요소이다. 대형병원과 달리 중소병원의 경우 별도의 언론이 요구된다. 이 같은 다양한 요소를 포용하기 위한 위원 구성 문제가 생각보다 간단치 않은 것이 사실이다. 여전히 변동성이 남아있지만 지금까지 논의 된 경영계 위원구성(안)은 병원 특성을 고려하여 6개 대표병원이 제안되어 있다. 대한병원협회, 국립중앙의료원,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 국립대병원, 사립대병원, 중소병원이다. 다만 이들의 대표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의 문제가 남아있지만 대체로 각 단체의 병원장과 부회장급 등의 구성이 예정되었다.

노동계의 위원구성은 조금 더 복잡한 양상이다. 그동안 양대 노총 대표산별로써 한국노

총의 의료노련과 민주노총의 보건의료노조가 6명 구성을 각 3명씩 안분하는 것으로 예정하고 있었다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의료연대본부)가 참여하면서 노동계 위원구성이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더욱이 최근 위원구성에 대한 참여단위 문제와 관련하여 보건의료노조가 정부 측 위원구성을 차관급으로 하는 복층구조를 제안하면서 위원 구성이 더 큰 난관에 봉착해 있다. 이는 ‘공공기관위원회’가 노동계의 정부 측 참여단위를 차관급으로 요구하면서 출범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과 유사하다. 현재 보건의료부문의 업종별위원회 위원구성과 관련하여 3개 산별·연맹단위 노조가 별도의 논의를 통해 조율을 시도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건의료 업종별위원회의 위원장과 공익위원 등은 초기 노동계 간담회에서 일부 논의된 바 있으나 현재 구체적인 진전이 있는 상황은 아니다. 노사정 위원구성이 먼저 확정된 이후 논의될 예정이다.

## 논의시한

의제·업종별위원회의 공식적인 활동은 1년 이내이며 필요에 따라 연장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보건의료 업종별위원회 역시 이 기준에 준하여, 의제 성격에 따라 단기적 과제와 중장기적 과제를 분류한 후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관련 의제와 의제별 논의 시한은 위원회가 꾸러진 이후 자체 논의를 통해 결정될 예정이다.

## 향후 계획

그간 각 주체별 간담회를 비롯해 노사정이 참여하는 준비회의가 두 차례 있었다. 이 과정에서 위원구성 문제가 해소되지 않아 위원구성에 대해 노동계가 자체 조율을 시도하고 있는 과정에 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공식 출범한 뒤 민주노총의 공식적인 참여 결의가 보류된 상황에 있다. 내년 1월 민주노총의 참여 결의 후 보건의료 업종별위원회 구성 논의가 속도감 있게 진전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다만, 그 이전이라도 위원구성에 관한 논의가 자체적으로 진전될 경우 비공식적인 간담회가 개최될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